

문재인정부 출범 下 사회복지계의 전망과 과제

이태수

꽃동네대학교 교수

(전)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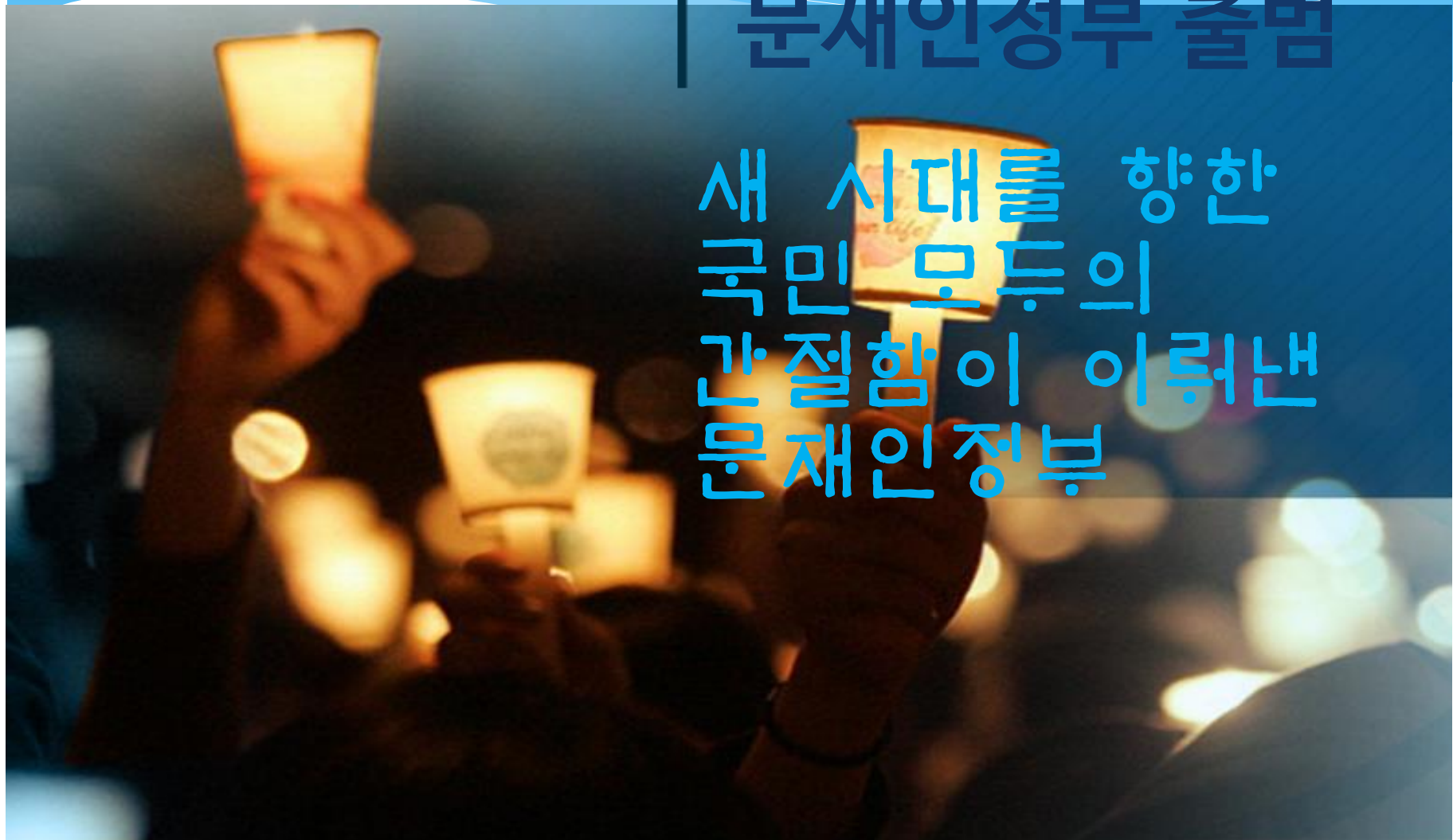


**문재인정부,
무엇을 하려 하는가?**

2017년 5월 10일,

문재인정부 출범

새 시대를 향한
국민 모두의
간절함이 이뤄낸
문재인정부



문재인정부의 역사적 의의

* 정권교체

- 10년만의 (상대적) 진보세력으로의 정권교체

* 시대교체

-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구
- 양극화와 파탄으로 점철된 민생의 회복
- 산업화(-1980s) -> 민주화(1990s) -> 신자유주의(2000-2016) -> ?

* 미래교체

- 대한민국의 미래 좌표의 대전환



국민과의 약속, 끝까지 지켜드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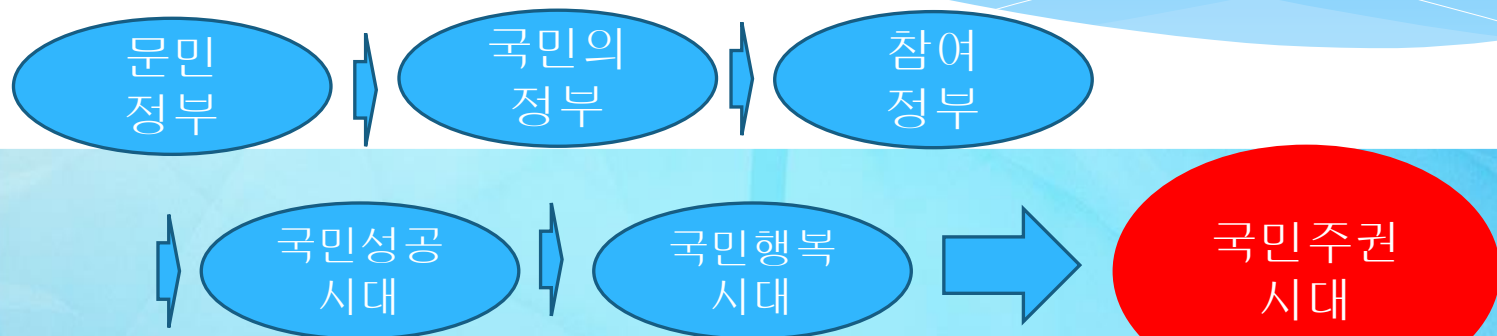
100대 국정과제

2017 ⑦ 2022

문재인정부

국정운영 5개년 계획

문재인정부의 시대 규정



-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
- 직접민주주의
- 일상의 민주주의
- 과정의 민주주의
- 풀뿌리민주주의

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* 국민 the nation

-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한 원동력으로서의 촛불 민심
 - 국민의 직접적 참여와 주권 실현
- “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!”

* 정의 the justice

- 정치, 사회, 경제적 적폐청산
 - 불평등, 갑을사회, 특권반칙으로부터 정의의 사회
- “기회는 평등하게, 과정은 공정하게, 결과는 정의롭게”

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 목표

5대 국정목표

1

국민이 주인인 정부

정치

2

더불어 잘사는 경제

경제

3

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

사회
정책

4

고르게 발전하는 지역

지역

5

평화와 번영의 한반도

외교
국방

국가비전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5대 국정목표

국민이
주인인 정부

- 국민주권의
촛불민주주의 실현
- 소통으로 통합하는
광화문 대통령
- 투명하고 유능한
정부
- 권력기관의
민주적 개혁

더불어
잘사는 경제

-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
일자리경제
- 활력이 넘치는
공정경제
-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
민생경제
- 과학기술 발전이
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
- 중소벤처가 주도하는
창업과 혁신성장

내 삶을
책임지는 국가

- 모두가 누리는
포용적 복지국가
- 국가가 책임지는
보육과 교육
- 국민 안전과 생명을
지키는 안심사회
- 노동존중·성평등을
포함한 차별 없는
공정사회
- 자유와 창의를
넘치는 문화국가

고르게
발전하는 지역

- 풀뿌리 민주주의를
실현하는 자치분권
- 골고루 잘사는
균형 발전
- 사람이 돌아오는
농산어촌

평화와
번영의 한반도

- 강한 안보와
책임 국방
- 남북 간 화해협력과
한반도 비핵화
-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
당당한 외교

20대 국정전략

100대 국정과제

15개

26개

32개

11개

16개

1_ 국민이 주인인 정부

- 소통하는 대통령
 - 광화문 대통령
- 적폐청산
 -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국정농단 엄벌
- 청렴한국
 - 반부패총괄기구 설치, 시민공익위원회 설치
- 권력기관개편
 - 공수처 설치, 광역단위 자치경찰
- 국민참여 보장
 - 국민인수위원회, 선거연령 인하, 투표시간 연장
- 과거사 청산
 - 제주 4.3, 5.18 광주민주화 제자리 찾기
- 정부혁신
 - 스마트정부,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
- 시민사회 성장
 -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, 사회혁신기금, 시민사회발전법

2_ 더불어 잘사는 경제 : 소득주도성장과 황금삼각형

임금주도성장(wage-led growth)

- ✓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채주도성장과 자본친화적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회의론 확산
- ✓ 국제노동기구(ILO): 소득불평등과 수요부족이 세계경제 불황 지속의 원인, 기존 이윤주도성장(profit-led growth)의 대안적 성장모델로 제시
- ✓ OECD와 IMF도 지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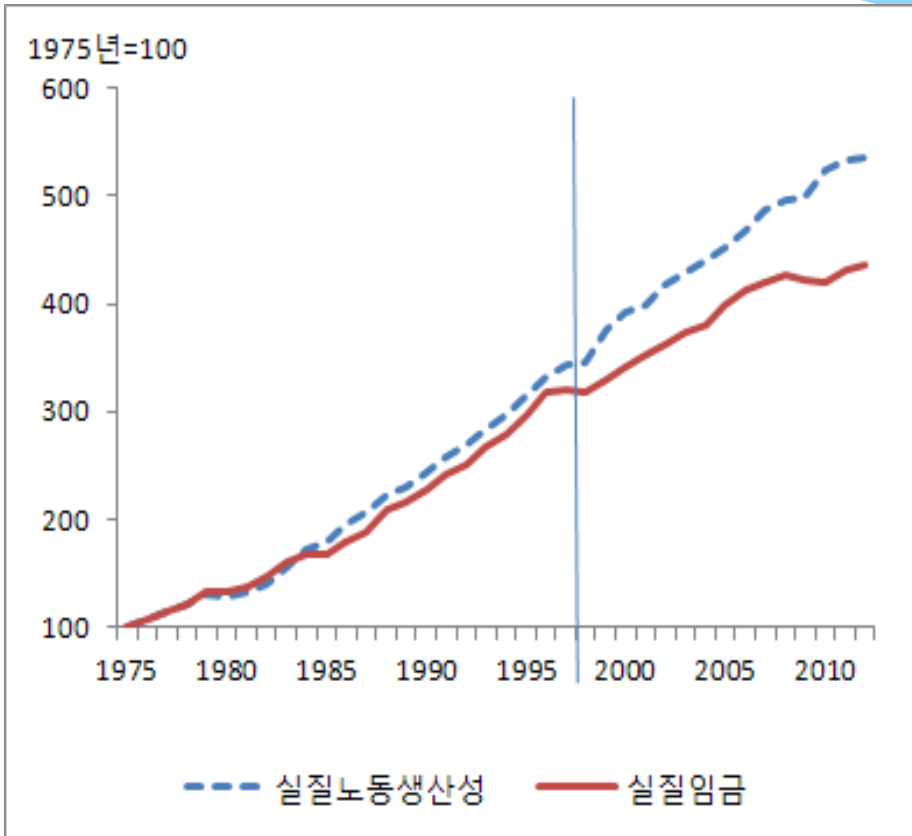
소득주도성장(income-led growth)

- 임금주도 성장의 국내 버전(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현실 여건 고려)
- 2012년 대선 이후 야권에서 소득주도성장 제기
-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, 가계소득증대세제 발표
- 2015년 3월 디플레이션 우려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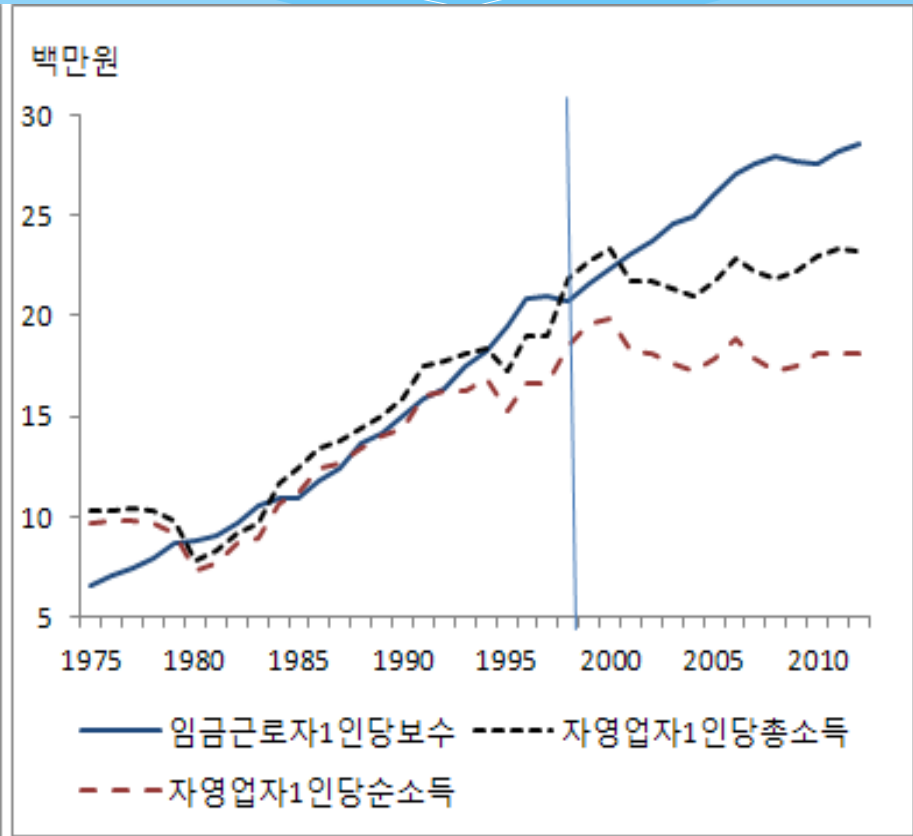
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

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원인: [1] 실질임금 증가율 < 노동생산성 증가율
[2] 자영업자 소득 정체

<그림>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



<그림>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1인당소득



- 주: 1) 임금근로자 1인당 피용자 보수=피용자보수/임금근로자수
2) 자영업자 1인당 총소득=(가계부문 영업잉여+가계부문 고정자본소모)/자영업자수
3) 자영업자 1인당 순소득=(가계부문 영업잉여)/자영업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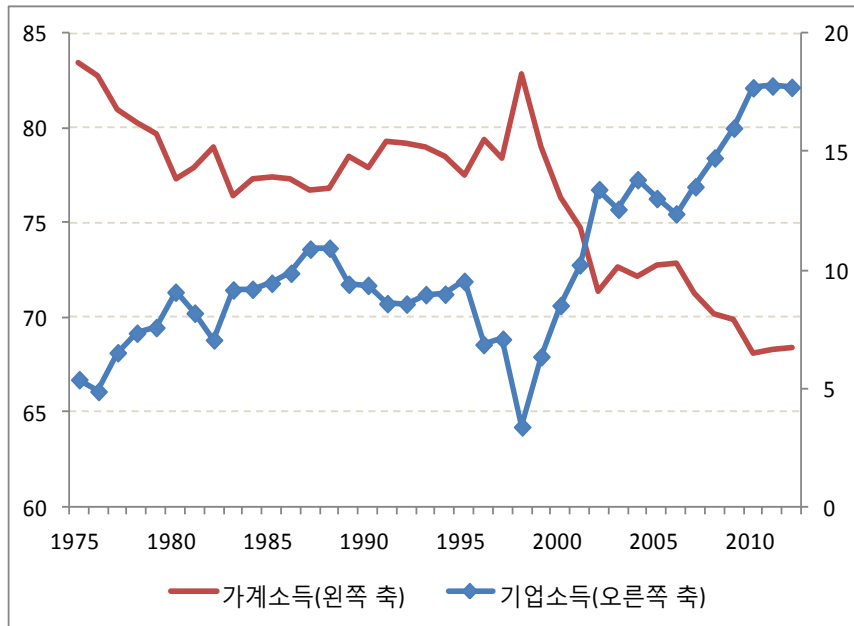
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

기존 성장전략의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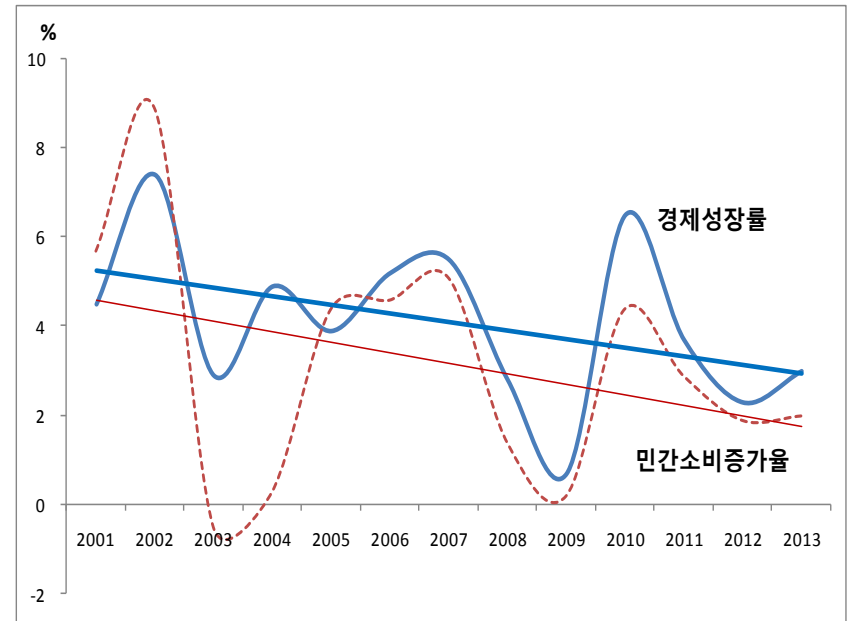
- 낙수효과(trickle down effect) 약화로 가계소득 위축
- 가계부채 1,000조원 VS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 유보금 516조원

→ 소비위축과 성장둔화

<그림>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



<그림> 민간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 (2001-201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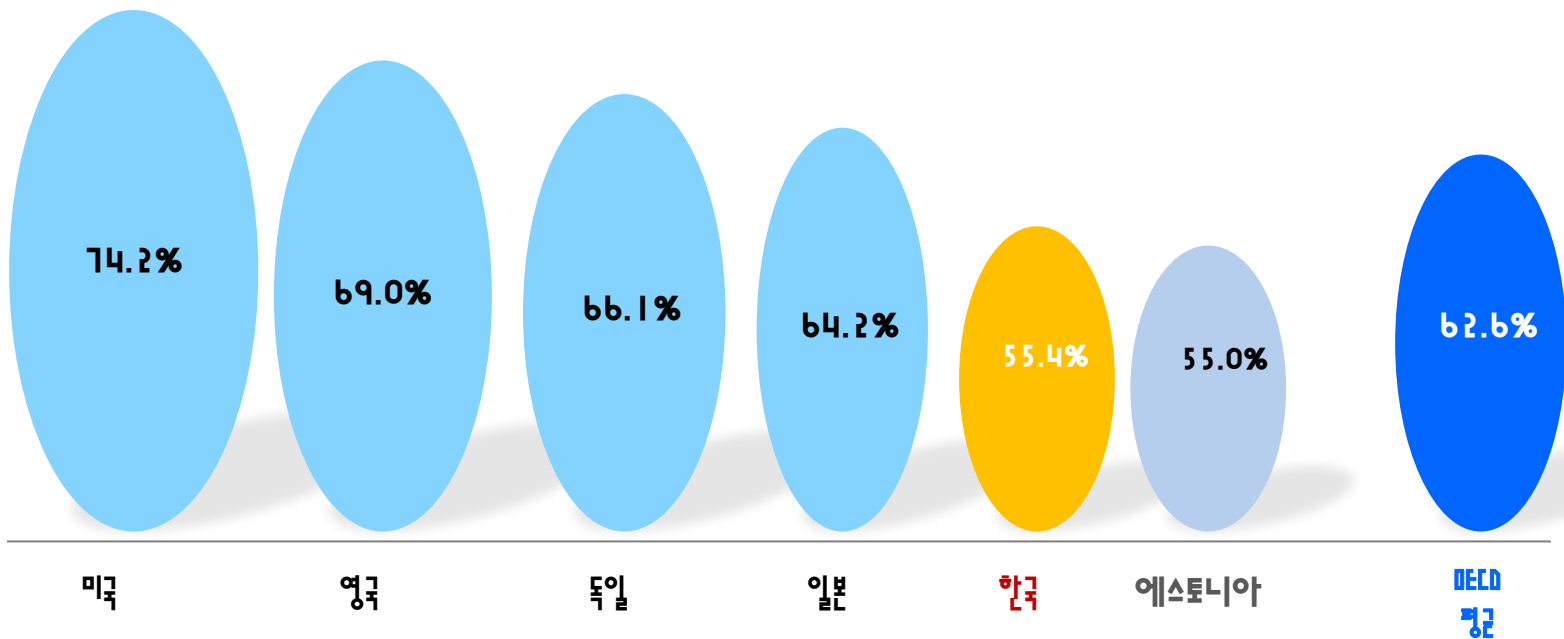
주: 1) 기업소득=일반기업소득+금융기업소득
2) 가계소득=피용자보수+가계부문 영업잉여+재산소득

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

- 국민소득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: OECD평균 수준(21개국중 16위)

가계소득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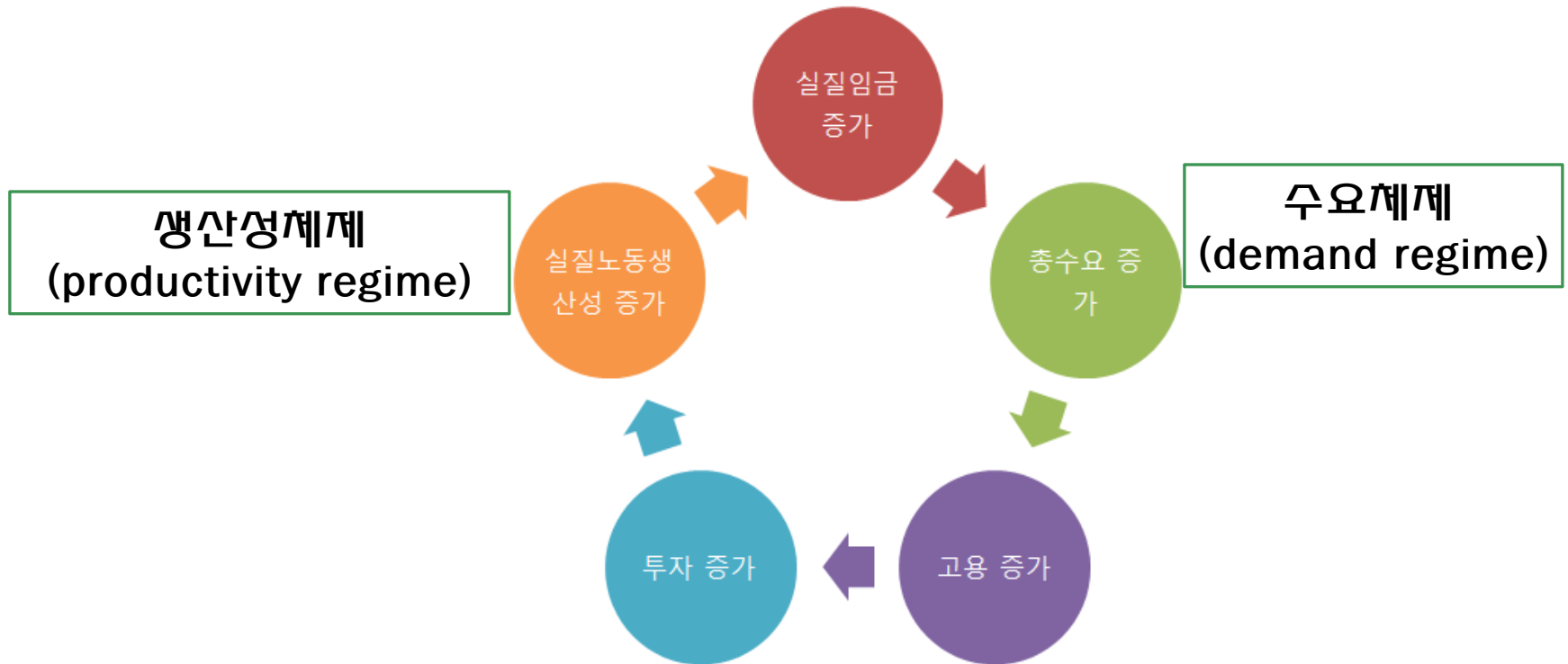
<그림>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



주: 가계총처분가능소득=국민총소득(GNI)-(기업소득+정부소득)

소득주도 성장모델의 핵심

실질임금 증가(소득분배개선) → 소비, 투자증가 → 노동생산성증가 → 경제성장



(참고) 경제-복지-노동의
Golden Tri-angle

유효수요 창출과
사회투자

복지

의료 주거 돌봄
교육 노후

일을 통한 복지

복지 지속가능
성 확보

국가

노동의 질 확보

혁신의 장 마련
성실, 조세

보편적 조세
사회적 임금

자본 정당성
경영권 승인

노동권 보장

자본

시민
노동

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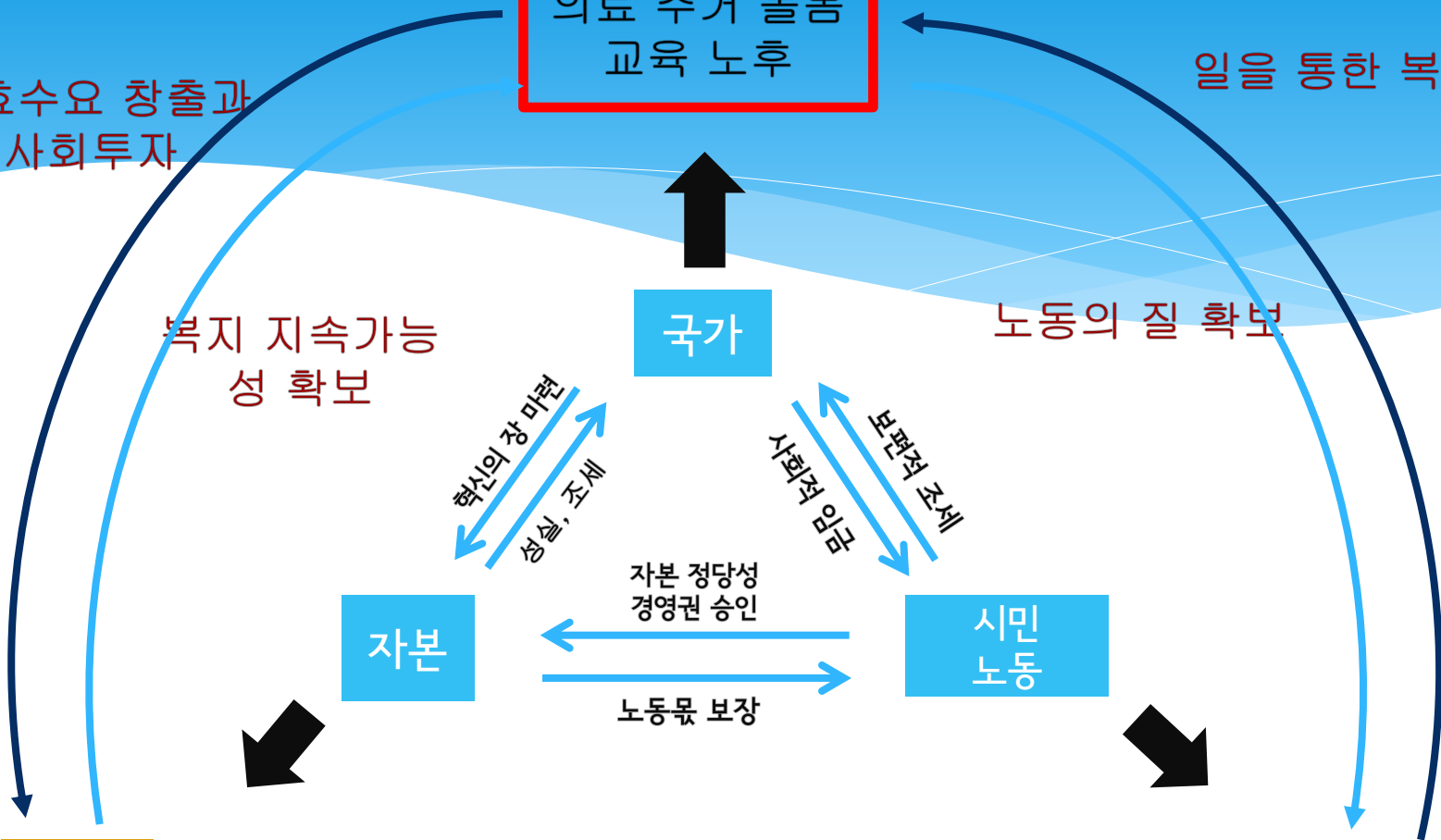
지식기반 경제 주도
사회적 경제 증진
부가가치 증대

안정적 성장기반 확보

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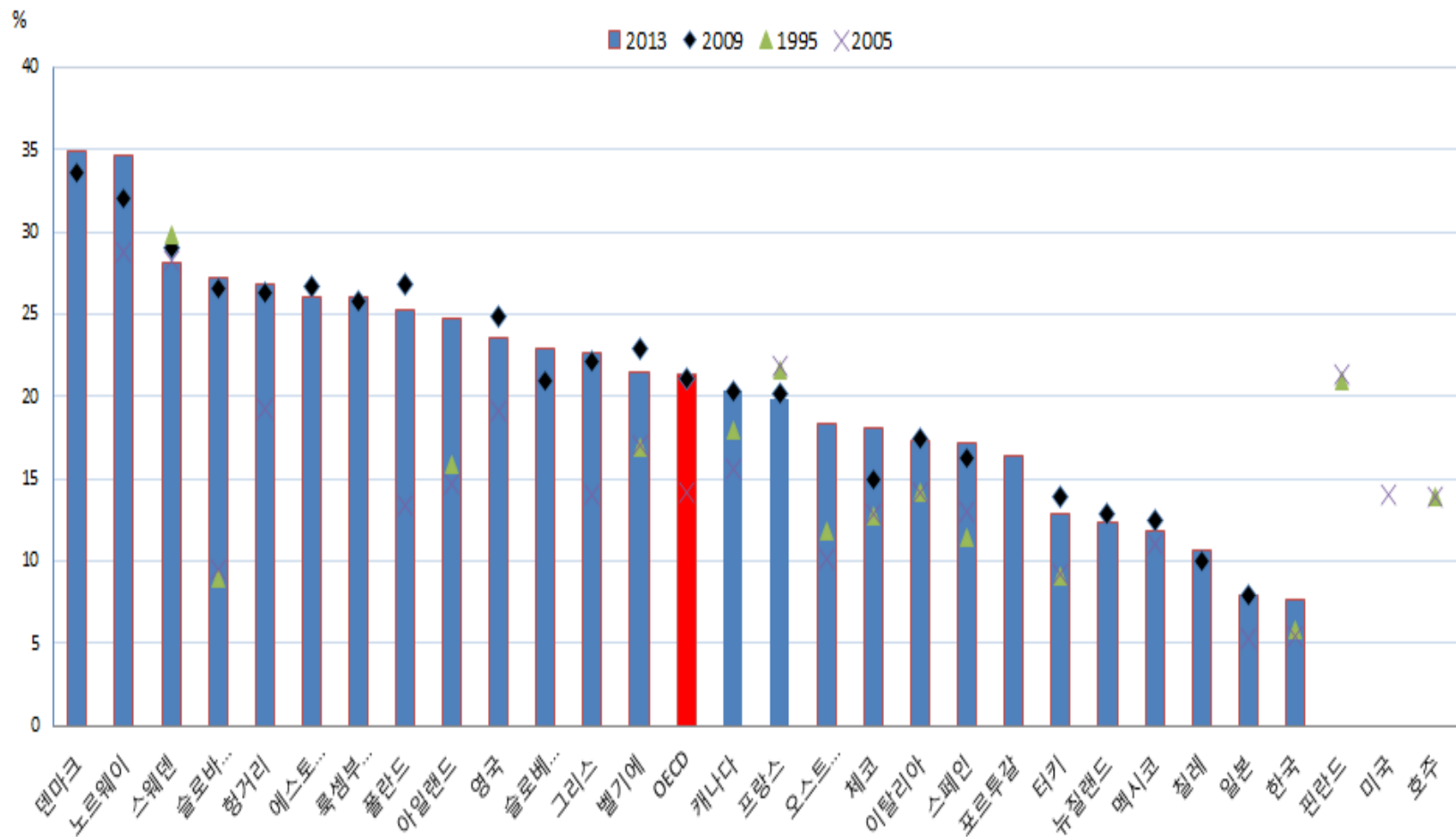
생활소득 보장
공정 분배

일자리 창출



2_ 더불어 잘사는 경제

- 81만 4천개의 공공일자리 창출
: 17만 4천명 : 34만명 : 30만



2_ 더불어 잘사는 경제

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공공서비스전달체계의 혁신과 좋은 일자리descent job

사회서비스공단?

- 의의
 -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+ 노동조건의 안정성 + 공공일자리 창출
- 주요 분야
 - 영리로 인한 공공성 훼손 심각 분야
 -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열악
 - 공공서비스의 표준 모형 필요
- 형태
 -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(가칭)사회서비스공단 설치
- 시기
 - 2018년 부터 법과 제도 정비 후 실시 예정

2_ 더불어 잘사는 경제

- 재벌 개혁
- 공정시장 질서
- 국민생활비 경감
(교통, 통신비)
- 4차 산업혁명의
선도

3_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

1> 포용적 복지국가

❖ 포용적 복지국가란?

- 포용적(inclusive)이란?

- ‘포괄적’, ‘포섭적’, ‘비배제적’
- OECD의 inclusive growth에 비견
- 보편적, 적극적이란 의미와 상통

-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축

- 1) 계층의 포용 : 빈곤층,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+ 중산층
- 2) 제도의 포용 : 새로운 제도(아동수당 등 기본적 소득)
+ 기존 제도의 개혁(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사회서비스 등)
- 3) 급여의 포용 : 적정수준의 회복(기초연금 인상, 육아휴
직급여 인상 등)

1> 포용적 복지국가

- 소득보장

- 아동수당 도입
- 기초연금 인상
- 청년고용촉진수당 도입
-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
- 장애인 연금 단계적 인상
-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(보험료 지원등)
-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
-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재조정
-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급여액 인상
- 실업급여 인상

1> 포용적 복지국가

- 서비스보장

- 영유아
 -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율 40%
 - 표준보육비용 현실화와 맞춤형 보육 폐지
- 아동
 - 퇴소아동 자립 강화
 - 아동보호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컨트롤타워 설치
 - 시설보호에서 가족중심 보호
 - 온종일돌봄서비스체계 구축
 -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
 -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접근..
- 노인
 - 치매국가책임제(치매안심센터, 치매안심병원, 의료비보인부담 경감, 경증치매 급여제공)
 -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
 - 경로당 기능 강화..
- 장애인
 -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
 -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
 - 최종증장애인 상시돌봄제공체계 구축
 - 어린이재활병원 확충
 -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
 - 장애인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

1> 포용적 복지국가

- 서비스보장

- 정신질환
 -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운영
 - 전문인력 대대적 확충 및 처우개선
- 가족
 -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
 -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및 학습권 보장
 - 결혼이민자위한 종합지원체계 확립
 - 건가센터의 사업 확대
- 자활

- 교육보장

- 고교무상교육, 혁신학교 확대, 고교 학점제 도입...

- 건강보장

- 비급여 축소, 아동입원진료비 부담 경감, 실손보험 개혁, 의료체계 개편...

- 주거보장

-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,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공급, 장애인 및 어르신 등 주거사각지대 해소

2>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

- 주 52시간 근로, 칼퇴근법
- 노동기본권 보장,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, 노동이사제, 체불근로자 생계 보호... 등

3>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로 인구절벽 해소

-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지원, 10 to 4, 육아휴직 급여 인상, 아빠보너스제, 일과 가정의 양립.... 등

4> 문화창의국가

- 문화의 공공재화, 예술가 권익보호 및 지원(고용보험 도입),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도모

5> 지속가능한 사회

- 미세먼지 임기내 30% 감축(경유차 감축, 민감계층 보호), 4대강 재자연화 물관리 일원화 ... 등

6> 성평등사회

- 성평등위원회 대통령 직속 추진, 성평등 담당관 각부처 및 지자체 배치,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.... 등

4_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: 자치, 분권의 나라

- 제2의 국무회의
- 주민소환, 주민투표의 확대
- 지방이양일괄법 제정
- 마을자치의 활성화
- 읍면동 주민센터의 혁신
 - * 서울시 찾동의 전국화
- 국세 지방세 비율 8:2 => 7:3
- 국가균형발전 : 혁신도시 2.0
- 농산어촌의 새로운 발전전략
 - * 농어민회의소

.....

5_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

- 전작권 전환
- 남북경협 재개
- 병 봉급 인상
- 방산비리 척결
- 동북아플러스 책임국방.....



사회복지계에 대한 직접적 변화는
무엇인가?

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?

- * 국가 책임 영역의 확대
- * 전달체계의 공공화/복지공급 주체의 다양화
- * 복지의 지방분권
- * 노동권있는 사회복지인
- * 정책 변화의 공간과 통로 확보

그러나...

- ❖ 서비스 중간조직으로서의 시설과 기관의 위상 제고?
- ❖ 현재 인력의 공공화?
- ❖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에 대한 획기적 변화?

사회복지 현장의 혁신은?

- * 서비스 현장과 인력의 확대
- * 사회서비스공단
- * 찾동
- * 임금격차 해소, 정규직화 등 노동조건의 변화
- * 시설 평가제 개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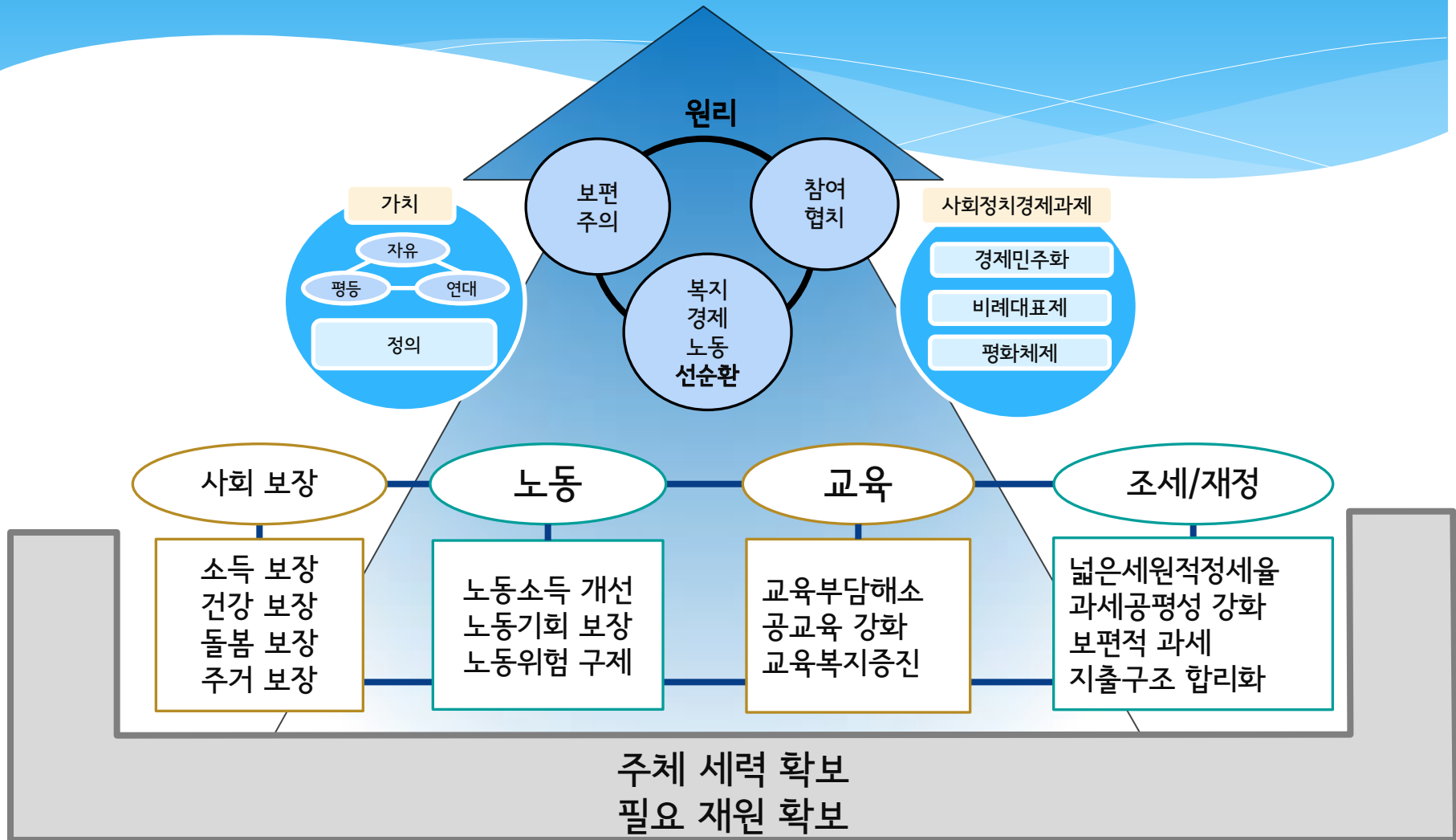
⇒ “저녁이 있는 사회복지사?”

⇒ “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사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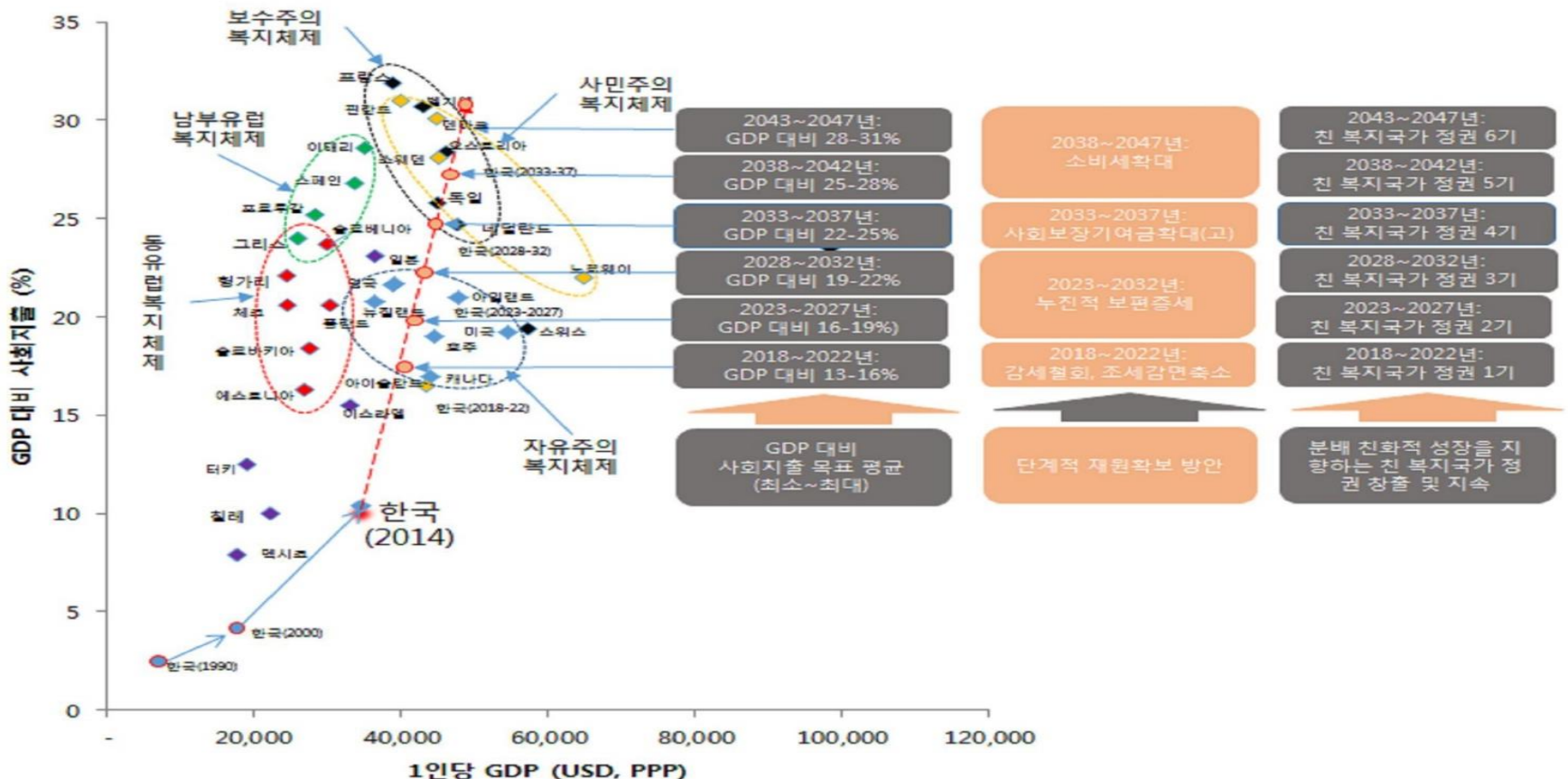
사회복지계,
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?

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나?



복지국가의 전망

- * 보편적 복지국가 추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!
- 한세대 간에 걸친 복지국가 만들기



사회복지계 현장의 현주소?

- * 미시적 실천 vs 거시적 실천
- * 위탁사업 vs 독자사업
- * 민간 아닌 민간 vs 공공인 민간
- * 자기 사업과 시설에 매몰 vs 지역사회 내지 주민삶의
총체적 시각
- * 복지국수주의 vs 폭넓은 연대와 이해
- * 사업만 있고 가치는 없다 vs 가치가 숨쉬는 조직
- * 주어지는 정책 vs 쟁취하는 정책

이제, 사회복지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?

- 1) 복지국가를 위한 건강한 깨어있는 시민의 토대 만들기
 - 복지인의 가치 및 인식 전환
 - 복지국가의 이념(자유, 평등, 정의, 연대) 지역내 확산
 - =>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재정립

- 2) 사회복지 현장의 역동성 강화
 - 학습화 -> 조직화 -> 운동화
 - => 현재 협의회, 협의체에 대한 역할 재조명

이제, 사회복지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?

3) '내 삶을 바꾸는' 정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

- 대선 과정에서의 사회복지계 대응에 대한 성찰

- * 복지국가총연대회의 결성과 역할

- * 더민주당 내 복지국가위원회를 통한 1만명 지지

- 복지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개인별, 조직별 정립

=> 2018 지자체 선거를 통한 생활정치 현장의 참여

- * '1 사회복지인 1권리당원' 운동, 복지정치 아카데미..

4) 사회복지계 내의 복지국가 추진세력 토대 마련

-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중앙과 지역에서 견인하는 추진세력 확보

- * 상층부 운동의 한계

- * 정책의 이해에서 정책의 변화를!



복지국가를 회구하는

사회복지인들의 열망과 의지가 모여

복지국가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선도함으로써

누구도 흔들 수 없는

담대한 복지국가의 닻을 올려야!!!